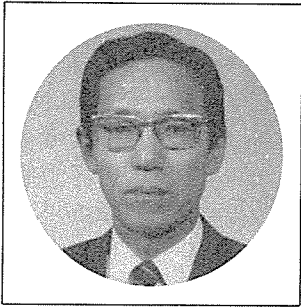


한국의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生活의 質높이는 「환경철학」전실



李 承 務

延世大교수 · 화공학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른 급속한 발전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제14위의 수출국가, GNP \$6000대의 준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우리는 공업국으로서의 국제지위 향상과 국민생활의 풍요로움 등의 득이 대단히 컸지만 반면에 빈부의 격차, 농어촌의 쇠퇴, 국민윤리의 무핵화 그리고 우리 생활환경의 극심한 오염현상 등의 부정적인 실도 가져왔음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60~'70년대의 수출일변도정책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오늘날 360만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매연과 무계획적인 연료정책으로 초래된 산성비, 스모그 현상등의 도시공기오염, 농경, 도시하수 그리고 산업폐수의 무방비적인 방류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은 도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시고 숨실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음을 한탄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의 향상과 일회용문화와 과소비풍조의 만연으로 1인 1일쓰레기 단위 배출량에서 세계 제1위를 나타내면서 총인구의 70%의 도시집중화, 무질서한 도시개발, 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 무관심과 무계획적인 행정, 특히 Nimby 현상에 따른 매립지의 확보난으로 매일 배출되는 엄청난 쓰레기가 전국도처의 구릉지나 하천 고수부지에 비위생적으로 투기되므로써 쓰레기로 덮힌 국토의 요인모를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은 겉으로는 고층빌딩과 내온싸인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것 같지만 속으로는 쓰레기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서울시 북판에 있는 난지도와 같이!

쓰레기의 처리와 환경청소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현명하게 처리하여 왔던 기록이 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궁내에 「내시부」를 설치하면서 궁내의 소제를 전임하는 관

직 「정팔품」인 「상제」를 6명 배속케 하여 청소를 담당하게 한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쓰레기 처리행정이며 강화도의 유적으로 남아있는 금연「방생축자 장일백, 기회자 장팔십」은 이조 철종때의 폐기물 처리의 지방행정 지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하여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금수강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유산으로 남겨주었지만 우리는 지금 무책임하게 마구 버려지는 엄청난 쓰레기를 뗏꾼의 수거료와 빙산의 일각적인 적은 예산으로 처리처분하고 있는데 역부족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폐기물로 인한 우리의 생활환경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소득증대와 소비성향, 그리고 유통구조의 발달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증가로 우리나라 쓰레기 배출량은 1990년 현재 전국에서 부피톤으로 3천 2백만톤/년(82,000톤/일)을 초과하고 있는데 연7%의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단위배출량(per Capta Generation)으로 환산하여 보면 2.2kg/인/일로서 미국 1.69kg/인/일('89), 일본 1.0kg/인/일('86), 독일 1.1kg/인/일('87), 스웨덴 1.0kg/인/일과 비교하여 볼때 우리나라는 배이상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의 맹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은 58천톤/일('89)로서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연13%의 증가율로 나타내고 있다.

배출된 도시폐기물의 조직성분을 세계 각도시 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1과 같은데 서울의 평균조성 성분도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어 연탄재 함유량 27%의 정도를 제외하면 소각여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질되어 왔다. 특히 요즘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류의 함유량이 증가하여 쓰레기의 부피비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분리수거제가 실시되면서 이것을 비닐봉지로 싸게 되므로써 쓰레기는 온통 플라스틱으로 변하고 말았다.

표1. 각 도시의 쓰레기 조직성분 비교(1986)

(단위 : %)

도시명	주개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
뉴욕	18.1	52.5	3.2	7.5	8.1
런던	26.7	35.5	5.2	6.0	10.5
파리	16.0	43	7.0	5.0	11
베를린	20.2	18.5	1.0	5.2	9.8
로마	38.0	18.0	4.0	3.0	4.0
싱가폴	28.1	21.6	15.8	7.1	4.8
윈헨	42.3	20.0	7.6	3.9	11.6
동경	36.0	38.3	7.7	1.4	2.6
서울	41.2	27.3	8.8	2.2	8.6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매립이 93.9%, 소각 1.9%, 재활용률이 2.9%로서 전국 601개소의 매립지(이중 위생매립지는 4개소)에 거의 전량을 비위생매립 처분하고 있으며 정식 소각은 목동 150톤/일 규모의 소각공장 1개소뿐 그외는 노천소각에 의존하고 있고 재활용률은 너무나 저조하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의 처리현황을 표2에 나타내었는바 일본은 전국 3천3백여 개소의 소각로를 운영, 소각감량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매립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매립지 확보난으로 역시 소각처리 + 재활용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매립일변도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소각감량화, 재활용화 광역위생매립의 기본방향을 설정,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분리수거 및 예치금제도의 도입을 위시하여 소각공장, 중계처리장 및 재활용화센터 등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와 더불어 재활용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역량을 살펴보면 표3과 표4와 같다.

■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당면문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지표로 삼아왔던 기본이념은 감량화, 무해화 및 자원화로 1960년대로 부

표2. 일본 및 미국의 쓰레기 처리현황

(단위 : %)

처리방법 국명	매립	소각	재활용	비고
미 국	48	39	13	1989
일 본	28	69.1	2.9	1987
한 국	93.9	1.9	2.9	1989

터 20여년간 세계 각국의 폐기물행정은 소각시설의 건설 확대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근년 쓰레기의 발생량 증가, 질의 복잡화, 발열량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소각설비로는 이에 대응하기 곤란하여졌고 더욱이 최종 매립지의 확보는 NIMBY 현상의 파급으로 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발생량의 억제와 쓰레기의 Recycling을 핵으로 하는 폐기물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하여, 현재의 가장 큰 폐기물문제는 처리곤란한 물질의 증가와 질의 다양화 특히 발생량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또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처분문제, 석면, 감염성의료폐기물 및 유기염소계의 유해물질의 처리문제, 해양투입 처분에 의한 해양오염, 그리고 폐기물의 국제적인 월경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의 소각설비로부터 발생하는 SO_x, NO_x, HCL, dioxine, 중금속으로 대표되는 유해물질의 처리문제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 질적으로 그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그 내용은 복잡 고도화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은 단지 일개의 담당청소국, 관할도, 일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표3. 폐기물 재활용실태(1989)

항목 종류	발생량 (천톤/년)	회수율 (천톤/년)	재활용률 (%)	회수율 (억 원)
공 병	2,048	1,897	92.0	3,791
폐 지	3,812	1,619	42.5	1,457
고 철	8,305	6,254	34.2	4,690
폐플라스틱	860	361	35.0	177
폐 유 류	317	184	58.0	138
폐 타 이 어	114	48	42.1	150
계	25,456	10,293	40.4	10,403

표4. 1회용품 공급실태(1989)

(단위 : 백만개)

품명	항목	공급량	제조업수
1. 캔 류			
-알미늄캔		540	1
-주 석 캔		2,304	5
2. 알미늄접시		400	10
3. 종이제품			
-종 이 컵		2,000	140
-음 료 팩		2,400	4
-우 유 팩		4,900	
-종이거저기		500	5
4. 플라스틱(PET)병		700	10
5. 스티로폴용기		420	10
6. 드링크병류		880	10
7. 라면봉지		3,360	5

아니라 지구환경에 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투입처분을 위한 론돈 DAMPING 조약, 유해폐기물의 월경 및 관리처분을 위한 바젤조약 등을 위시하여 국제폐기물회의(ISWA), 국제 Recycling회의(IRC), 그리고 거의 매달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기술개발 및 전문기술의 정보교환, 재자원화 및 에너지 유효이용의 문제에서 부터 세계환경보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토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의 큰 과제는 쓰레기 발생량의 억제, 적정처리, 재자원화의 세가지를 들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에는 시민, 사업자, 행정의 명확한 역할분담의 삼위일체가 되는 전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심층, 분석하여 보자.

첫째, 우리나라의 폐기물행정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사나 행동을 도외시한 전적인 관주도형의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안할 수 없다. 과거 쓰레기가 사회문제화 되기 전인 1970년대의 낙후된 폐기물 행정은 고사하고라도 1980년 중반

이후의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쓰레기 행정도 계획 수립에서부터 처리처분에 이르기까지 복지고장구치는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이다. 행정측에서 쓰레기처리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한 일이 없고 학계나 사업자 또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토의와 지도를 통한 의견수렴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시민, 사업자 측면에서는 쓰레기가 배출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변화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수거하고 처리하여 준다고 생각하여 무책임하게 마구 버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거, 운반 및 처리비에 관하여 행정측에서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데에서 처리비가 비싸든 수거료가 싸든, 적정처리가 안되든 시민들은 무관심이다. 이러한 행정의 일방통행식은 비단 쓰레기 분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특유의 중앙집권제의 산물이긴 하지만 특히 폐기물행정은 시민이나 사업자들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서비스행정임을 감안할 때 당면한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정체계에 사고방식, 그리고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대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쓰레기행정은 발생량의 파악, 질의 물리, 화학적 분석에 의거, 현재의 수거-운반-매립의 쓰레기 처리시스템에만 적용, 전력투구하고 내면적으로 쓰레기의 양과 질의 변동을 가져온 사회적 구조와 요건, 시민들의 의식구조와 생활방식 등을 고려한 발생 요인과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이에 대처하는 정책 결정과 행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좀 가혹하게 표현한다면 즉흥적이고도 전시적인 정책결정과 행정활동인 것이다. 요즘 많이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자원화에 대하여 시민들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협력행동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단순히 행정측이 주체가 되어 감량화 및 재자원화의 정책을 결정하여도 소비자의 행동의식의 철저한 분석과약 없이는 일방적인 강제적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의식 = 협력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인

충분한 기본조사와 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로부터 시민, 사업자가 협력활동하기 쉬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폐기물처리시스템의 단순성과 비과학화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수거-운반-매립처분의 단계로 되는 쓰레기처리시스템은 단순히 배출된 쓰레기를 생활 공간으로부터 속히 배제시키는 방식에서 지금은 분리-수거-중간 처리/재자원화-최종매립의 단계를 거치는 쾌적환경과 정맥산업 창조의 개념으로 급진환을 시도하여 1985년부터 분리수거제를 도입하였고 목동, 신정동의 150톤/일 규모의 소각공장을 위시하여 대구시의 200톤/일 규모, 성남시의 100톤/일 규모의 소각공장이 건설중이며 환경처에서 발표한바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따라 1996년까지 전국 51기의 소각로, 77개소의 폐기물재자원화 센터, 6개소의 산업폐기물 매립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앞으로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찌서 지금까지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너무도 인색하였고 이의 관리시스템 개발에 무관심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부나 학계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출산업입국으로 오늘에 이르렀지만 반대로 우리의 후손에 유산으로 남겨줄 우리의 국토가 극심하게 오염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은 면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분리수집된 유가물들을 수용활용할 정맥산업이나 이의 유통시장의 조성이 너무 미급하여 숫자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에 차단되어 있고 Incentive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분류된 가연성 쓰레기라면 소각처리/여열에너지로 이용하여 최대로 감량화하여야 할 것이나 소각설비부재로 그것도 봉지에 싸서 전량 매립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분리수거의 목적은 감량화, 재원화 및 적정처리임을 감안할 때 이에 수반되는 우리의 폐기물처리시스템은 비과학적이고도 큰 모순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시책에 협력하여 열심히 분리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환경보전운동에 호응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루속히 국민이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1조 8천여억원의 정부투자로 낙후된 폐기물처리 장비의 건설은 늦은감이 있으나 오늘의 폐기물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창출이라는 지상과제로 받아들여지만 역시 국민들은 또하나의 전시행정의 산물로 오인할지도 모른다. 폐기물 문제는 서비스행정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전 쓰레기통의 개량, 지역사회에 맞는 분리수거 방식의 수집운반체계의 개선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협조할 수 있는 분리수거 시스템의 개발을 유도하고 재자원화 노력에 대한 Incentive부여등으로 이어지는 폐기물처리 Total System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금까지의 폐기물처리 체계에 있어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분리수거하여 개별적으로 문전배출하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거-운반-처리전반에 걸친 책임과 비용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도감독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곤란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미급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이나 행정측에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시민, 사업자와 행정간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역할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의 발생량 억제와 분리수거, 적정처리 및 재자원화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점점 복잡화, 고도화 되어가는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가 분담하여야 할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시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폐적환경을 창조하도록 협력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갖추어야

할 환경철학인 것이다.

여기서 시민, 행정 및 역할분담을 다음과 같이 정이하여 본다.

1. 시민의 역할

- (1) 쓰레기 = 자원이란 관점에서 분리수거 및 자원화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 (2) 소비활동 범위의 축소와 절약으로서의 쓰레기 감량화.
- (3) 지역환경 미화 캠페인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쾌적환경 창조노력
- (4) 생태계순환형의 도시시스템 창조에의 협조

2. 청소행정의 역할

- (1) 감량화, 적정처리 및 자원화로의 폐기물처리 시스템의 확립과 대민서비스 행정, 적정처리계획의 책정, 처리시설의 감독지도, 정확한 대민홍보 및 지도 등
- (2) 광역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의 확립
광역적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의 정량파악, 조성성분 분석자료 제공
폐기물교환 정보제공
폐기물 발생량 예측등의 정보교환
- (3) 재이용기술의 정비 및 연구개발 지원.
- (4) 감량화 및 재자원화 시스템조성 및 시장변동 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등

3. 사업자의 역할

- (1) 쓰레기의 감량화, 재자원화를 고려한 생산활동 실시
- (2) 폐기물배출 감량형, 처리용이형 제품의 개발(신소재, 신기술개발)
- (3) 사업계 쓰레기의 자가처리 및 재자원화 시스템 개발
- (4) 재자원 유통시스템의 개발 및 재정지원
- (5) 청소행정지원 및 협력체제 조성

넷째, 중기종합계획에 준하여 1996년까지 각종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로 인하여 처리시스템이 많이 보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미정비된 시점에서의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감량화와 재자원화시책의 조속한 실시에 있다.

쓰레기의 감량화는 쓰레기의 배출 억제이다.

버리면 쓰레기 거두면 자원!

이 방법의 하나는 잠재적 폐기물이 될 수 있는대로 장기간 사용하거나 재자원화하여 잠재적 폐기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은 발생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단계, 또는 중간처리단계에서 될 수 있는 한 재자원화하여 최종 매립하여야 할 절대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잠재적 폐기물의 순환은 먼저 국민들의 중고품 애용과 쓰레기 적게 버리기등의 의식구조의 정착이 필수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상품으로부터 폐기물이 되는 부분의 최소화, 또는 신소재의 개발에 의한 상품소비재의 연명화 등의 유통구조와 제품의 품질개량등 폐기물 감량화를 전제로 하는 생산구조의 개편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처리단계에서의 감량화는 바로 유가물의 재자원화이고 기타 소각잔사의 고화처리에 의한 유효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따라서 감량화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적인 경제사회구조와 유통시스템, 지역주민의 의식구조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이때 출현하는 신제품에 대하여서는 E마크설정 등의 경제적인 Incentive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체계의 정비(일종의 오염자부담원칙적용)로 감량화의 이념을 추진하는 것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폐기물의 재자원화는 과거 고물상 또는 재건대를 통하여 잠재적 폐기물이나 유가물들을 개별적으로 수거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나 유통구조의 발달과 일회용품의 범람, 경제적 Incentive의 저하, 재자원화시장의 불황 등으로 종래의 조직으로서는 재자원화율의 제고를 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첫째로 재자원화를 위한 국가경제철학과 이에 따른 정책과 행정지원의 부재에 있다. 많은 유가물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처녀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성조사를 국가적으로 실시한 일이 없고 이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책은 오늘날에 와서 재자원화 제고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만큼의 경제성장은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이 없었으니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나 자원화시장의 육성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 한개의 한국자원 재생공사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전국

적인 자원화 열의의 고양은 역부족이다. 둘째로는 열성있는 미서 회수자나 재자원화 협력단체들에 부여되는 경제적 Incentive의 미소함에서 오는 활동중지이다. 아무리 좋은 재자원화조직은 갖추었다 하여도 문전회수나 집단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재자원화시스템을 구축할수 없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자원화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여 우리들의 Life Cycle에 맞는 자원순환(Recycle)형의 지역사회를 창조하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명확한 계획수립과 더불어 시민, 사업자 및 행정의 적극적으로 대응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1) 지역 재자원화시스템 조성
 - (2) 재자원화 시장활성화 및 안정화 대책
 - (3) 산업계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
 - (4) 법적체계의 확립
 - (5) 환경교육을 통한 윤리관 정립
- 재자원화 시스템의 구축

여기서 지역 재자원시스템의 조서에 있어서는

- (1)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적 조직체계의 재정비
- (2) 재자원화시스템에 대한 경제성평가조사 및 효과측정
- (3) 생산-유통-소비구조의 개선
- (4) 정부투자 및 민자유치등의 행정지원
- (5) 생태계 환경순환 Cycle의 재정비(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시스템 개선)

등이 같이 이루어져서 폐기물의 재자원화운동이 지역사회활동으로 정착되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의 감량화 재자원화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폐기물관리법중의 폐기물처리예치금 제도를 산업-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오염원자부담금제도로 확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감량화 및 재자원화에 대한 경제적 Incentive 부여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재자원화보진법(가칭)의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바로 세계의 추세인 것이다.

■ 결 언

2000년대를 향하여 우리나라는 산업,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대열 진입을 목표로 정부, 산업계와 국민모두가 합심하여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므로써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우리의 경제사회는 신기술의 혁신과 정보화로 산업의 Soft화가 이루어져 국제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산업사회가 형성되리라고 전망된다. 또 도시화 현상은 더 심화되어 전국 어디에도 도시환경의 조성으로 국민 대다수가 도시적인 의식행동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대개 시간낭비형의 과소비성, 자유시간의 선호와 가치권의 개성화,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와 질의 변화가 현저히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기술혁신-정보화-국제화로의 진행에 따라 신소재상품의 다종출현으로 성분도 모르는 처리곤란한 폐기물의 배출이 급증하므로써 질의 악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를 지향하여 오늘의 당면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과 동시에 미래지향형의 폐기물 문제도 풀어야 할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오늘날의 폐기물정책과 행정, 낙후된 폐기물처리시스템, 재자원화와 시민의 행동의식과 21세기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의 기본조류와 폐기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작성으로 접근하여, 단기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투자에 의한 행정지원으로 정부-시민-산업의 삼위일체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과 재자원화로 폐기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창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출현하는 비가시적인 개인행동의식과 새로운 폐기물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결속과 적극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철학의 정립과 쾌적한 지역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9월11일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에서 한국청년회의소 주최로 열린「환경문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전제한 것임..... 편집자